



[산업] 정의선 커넥티드카·수소차로 유럽 공략 나선다 05



Economy

코스피	2068.05 (-3.18)	코스닥	671.56 (+0.71)
금리 (미국 3년)	1.92 (-0.02)	환율 (원/달러)	1134.30 (+1.00) (14일)

‘삼바 고의분식’ 결론에 삼성 반발... 소송전 예고

삼바 주식거래 당분간 정치 대표 해임권고, 檢 고발 의결 뒤바뀐 결론에 투자자 멘붕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고의적인 분식회계로 결론을 내렸다. 특히 회계처리 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적용해 ‘중과실’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대표이사 해임을 비롯해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면서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 <관련기사 3면>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 주식 거래는 당분간 정치되며, 한국거래소(KRX)의 상장실질심사를 기다려야 한다.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 재검리 안전 논의를 위한 증선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증권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바이오 회계기준 위반 안전에 대해 대표이사 해임권고, 과징금 80억원, 검찰 고발 등을 의결했다. 증선위는 금감원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재검리 과정에서 제출된 내부 문건 등 이른바 ‘스모킹건’의 영향이 컸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겸 증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 일지>

시기	내용
2015년	7월 삼성바이오에피스, 미국 나스닥 상장계획 발표
	11월 코스피 상장규정 개정
	12월 삼성바이오로직스, 2016년 코스피 상장 준비 공개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사로 기업가치평가 전환
2016년	1월 삼성바이오에피스, 나스닥 상장 연기
	11월 삼성바이오로직스, 코스피 상장 12월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참여연대, 금감원에 분식회계 문제 제기
2017년	4월 금감원, 삼성바이오로직스 특별감리 착수 5월 금감원,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감사인에 조치사전통지서 발송 17일 1차 감리위원회 심의 25일 2차 감리위원회 심의 31일 3차 감리위원회 심의
	2018년
7월 4일 4차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및 금감원 수정안 제출 거부 12월 5차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및 조치결정. 금감원에 재검리 요청 19일 금감원, 증선위원장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재검리 결과 보고 31일 재검리 1차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11월 14일 재검리 2차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조치결정	

에에피스를 단독지배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한 것을 잘못으로 봤다. 바이오젠이 가진 콜옵션을 처음부터 지배력 결정 시 고려해야 하는 실질적인 권리라는 이유에서다. 다만 ▲국제회계기준이 2011년에 국내에 최초로 도입된 점 ▲회

사 에피스가 각각 2011년, 2012년에 설립된 점 ▲지배력 관련 새로운 회계기준서가 2013년에 시행된 점 등을 고려해 2012, 2013년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의 동기는 과실로 판단했다. 반면 2014년은 임상 실험 등 개발성과가 가시화된 만큼

위반 동기를 중과실로 결정했다. 증선위는 2015년 에피스 주식의 공정가치 평가차액도 취소돼야 한다고 결론냈다. 김 위원장은 “2012~2014년의 올바른 회계처리를 지분법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2015년에 에피스주식을 지분법으로 회계처리하면서 대규모 평가차액을 인식한 것은 잘못이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회사는 이전 년도에도 콜옵션 부채를 인식했어야 함을 2015년에 인식했지만 콜옵션의 공정가치평가가 불가능하다는 논리를 사전에 마련한 상태에서 이에 맞춰 외부평가기관에 평가불능 의견을 유도했으며, 이를 근거로 과거 재무제표를 의도적으로 수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콜옵션 부채만을 공정가치로 인식할 경우 회사의 재무제표상 자본잠식이 될 것을 우려해 지배력 변경을 포함한 다소 비정상적인 대안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했다는 얘기가.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논란은 지난 2016년 12월 정의당 심상정

의원과 참여연대가 문제를 제기한 지 2년여 만에 일단락됐다. 재검리 심사까지 모두 3차례의 감리위원회와 7번의 증선위가 열렸다. 그러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다툼의 장이 증선위에서 법정으로 옮겨왔을 뿐이다. 삼성바이오는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에 증선위를 상대로 콜옵션 공시 누락 판단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삼성바이오는 이번 증선위의 판단 역시 불복할 가능성이 높다. 행정소송과 함께 분식회계 관련해서는 형사소송에 들어갈 수 있다. 정치권과 시민단체도 이번 증선위의 판단으로 투자자 손실에 대한 소송과 삼성물산에 대한 감리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는 이날 증선위에 앞서 “삼성바이오 내부문건에 표현되어 있는대로 통합 삼성물산은 합병시(제일)모직 주가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삼성바이오의 가치를 목표수준에 맞춘 만큼 통합 삼성물산에 대한 감리는 불가피하다”고 밝힌 바 있다. /안상미·나유리 기자 smahn1@metroseoul.co.kr

또 현대차 압박나선 엘리엇

“초과자본 환원, 자사주 매입” 요구

미국계 행동주의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가 초과자본금의 주주 환원 등을 요구하며 또 다시 현대자동차그룹을 압박하고 나섰다. 올해 초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작업에 제동을 건 뒤 벌써 세 번째다. <관련기사 8면> 엘리엇의 이 같은 갑작스런 요구를 둘러싸고 업계에서는 주주들을 설득해 공격 투자로 인한 손실을 만회하고 향후 주주총회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엘리엇의 주장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서울 서초구 양재동 현대자동차그룹 본사 사옥. /연합뉴스

엘리엇은 지난 13일 현대차그룹에게 보낸 서신에서 “현대차그룹은 심각한 초과 자본 상태”라며 “초과자본금을 환원하고 자사주(자기회사주식) 매입을 우선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또 “주요 계열사들에 독립적인 신규사외이사를 선임해야 한다”며 “지배구조 개편 방안은 주주들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엘리엇은 글로벌 자동차 컨설팅사 콘웨이 벡켄지의 ‘독립 분석 보고서’를 통해 현대차그룹은 초과자본 상태로 현대차는 8조~10조원, 현대모비스는 4조~6조원에 달하는 초과자본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현대차그룹 주식 가치가 떨어지자 자신들의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현대차그룹이 자사주 매입에 나서라는 뜻이다. 이를 위해 초과자본금의 주주환원 등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엘리엇의 요구는 앞서 두 차례의 서신과 비교해 큰 틀에서 별다른 차이점을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현실화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서신에서 새로운 내용을 찾을 수 없으며 초과 자본 상태에 의미를 두는 건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들은 보유하고 있는 자본으로 연구개발 등에 투자하고 미래 경쟁력 확보한다”며 “자본이 늘어난다고 무차별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건 성장동력 확보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말했다. 특히 엘리엇은 시간이 흐를수록 투자수익을 올리기 위한 모습으로 바뀌고 있다. 처음 현대차그룹에 서신을 발송할 당시 현대차그룹의 분할합병 주주총회에 대한 반대이사를 표명했다. 엘리엇의 반대이사 표명 뒤 현대차그룹은 5월 말로 예정됐던 현대모비스 인적분할과 글로벌스와의 합병 주주를 취소했다. 두 번째 서신에서는 현대차와 모비스의 합병 요구 대신 모비스의 A/S부문을 떼내서 현대차로 넘기라고 요구했다. 지주회사 전환 대신 모비스와 글로벌스 간의 합병을 꺼냈다. 엘리엇은 또 주주 제안에 대한 협의를 위해 현대차그룹에 만남을 제안하기도 했다. 세 번째 서신은 더욱 과감해졌다. ‘초과자본금 환원’과 ‘저평가된 가치를 고려한 자사주매입 방안 우선 검토’ 등을 내세우며 노골적으로 투자수익을 보전해달라는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엘리엇이 현대차그룹을 상대로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며 “현대차그룹이 추가적으로 지배구조 개편 방안을 발표하지 않은 상태에서 엘리엇이 행동에 나설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양성근 기자 ysw@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둔 14일 서울 이화여자고등학교에서 수험생이 시험장을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늘 수능... 전국 1190곳서 59만여명 응시

오전 8시10분까지 입실해야 버스 등 대중교통 운행 증편 돌방상황 대비 수송대책 마련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15일 전국 1190개 고사장에서 일제히 치러진다. 올해 수능에는 전년보다 1397명 증가한 59만 4924명이 도전한다. 수능 한파는 없지만 서울의 경우 4~15도로 일교차가 심하고, 수도권 등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을 것으로 예보됐다. 올해 수능 지원자는 전년보다 증가했지만, 시험에 지원하고도 시험장에 나타나지 않는 결시율이 최근 5년간 매년 상승 추세다. 결시율에 따라 수능 상대평가 과목 성적 변동이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수능 결시율은

10.5%였다. 시험은 오전 8시 40분 1교시 국어영역(08:40~10:00)을 시작으로 2교시 수학(10:30~12:10), 3교시 영어(13:10~14:20), 4교시 한국사·탐구(14:50~16:32), 5교시 제2외국어/한문(17:00~17:40) 순으로(일반 수험생 기준) 이어진다. 수험생은 1교시 시작 30분 전인 오전 8시 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1교시를 선택하지 않은 수험생도 같은 시간까지 시험장에 들어가 감독관 안내에 따라 대기실로 이동해야 한다. 전날(14일) 받은 수험표를 잃어버린 경우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같은 사진 1장, 신분증을 지참해 시험장에 있는 시험관리본부에서 재발급받아야 한다. 시험장에 반입 금지된 물품은

휴대전화를 비롯해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와 디지털카메라·전자사전·MP3플레이어·카메라펜·전자계산기·라디오·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블루투스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가 포함된다. 시 지역과 시험장이 설치된 군 지역 관공서는 출근 시간이 오전 9시에서 10시 이후로 1시간 늦춰졌다. 지하철과 열차 등은 출근 혼잡시간대를 기존 2시간(오전 7시~9시)에서 4시간(오전 6시~10시)으로 늘린다. 이시간대 지하철·시내버스·마을버스 배차 간격이 짧아지고 운행횟수는 늘어난다. 교육부는 기상 악화 등 돌발 상황에 대비해 시·도별로 도서·벽지 수험생을 위한 수송 대책을 세우고 지진 대응 계획도 마련했다. /한용수 기자 hys@